

한반도 르네상스 구현을 위한

# VIP 리포트

■ 신북방정책 추진의 기회와 위험 요인

# 목 차

---

## ■ 신북방정책 추진의 기회와 위협 요인

Executive Summary .....	i
1. 개요 .....	1
2. 신북방정책 추진의 기회와 위협 요인 .....	2
3. 시사점 .....	9

## Executive Summary

### <요 약>

#### ■ 개요

유라시아 진출 교두보를 마련하여 한국 경제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신북방정책' 추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러시아 동방경제포럼(EEF : Eastern Economic Forum)에 참석(9.6~7, 블라디보스톡)하여, 신북방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할 전망이다. 이에 본 연구는 신북방정책의 의미를 알아보고, 정책 추진의 기회와 위협 요인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 신북방정책 추진의 기회와 위협 요인

**(의미)** 문재인 정부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과 경쟁구도를 타파하고 동북아 지역의 장기적 평화협력 환경 조성을 위해 신북방정책을 제시하였다. 이는 '한반도 신경경제지도' 구상을 실천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는 남북경협과 동북아경협을 활용해 동북아 평화 정착과 공동번영을 모색하고 있다.

**(기회와 위협 요인)** 신북방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기회와 위협 요인이 교차하고 있다. 한국을 비롯해 러시아, 중국, 몽골 등 주변국이 유라시아 협력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는 것은 커다란 기회요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한국의 신북방정책은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 몽골의 초원의 길 이니셔티브 등 주변국의 대외경제협력 정책과 상호 연결고리가 많아 우리에게 경제·안보적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신북방정책 추진은 유라시아 경제권의 잠재력을 활용하고, '동북아 플러스 책임공동체' 구축 토대를 마련하여 G-Zero 시대에 걸맞는 균형외교 추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의미가 크다. 반면 북핵 문제 미해결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 등 위협요인도 상존한다. 특히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는 신북방정책 추진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 ■ 시사점

신북방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북한을 포함한 다자 협력이 북한을 제외한 양자 및 다자 간 북방경협 사업을 추진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두 트랙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나진-하산 프로젝트 등 기 추진 사업의 재개를 통해 신북방정책 및 한반도 신경경제지도 구상 실현의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을 통한 사업 추진 및 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AIIB)을 활용한 재원 마련 등 국제 협력 기제의 효율적 활용이 필요하다. **넷째**, 새롭게 출범하는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기존 북방협력 관련 합의를 재검토하고, 이를 기반으로 단계적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실천해야 한다.

## 1. 개요

- 유라시아 진출 교두보를 마련하여 한국 경제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나아가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신북방정책' 추진의 필요성이 대두
  - 한국 경제의 활로 모색은 물론 한반도의 평화 안정, 동북아 공동 번영을 위한 '신북방정책' 추진의 필요성이 확대
    - 1988년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을 계기로 북방협력에 대한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강조되었으나, 북핵 문제와 국제사회의 제재로 실질적인 성과는 미미
    - 최근 한국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 한반도 정세 안정, 외교 다변화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다시금 북방협력에 대한 관심이 확대
  -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러시아 동방경제포럼(EEF : Eastern Economic Forum)에 참석(9.6~7, 블라디보스톡), 신북방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할 전망
    - 문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은 취임 후 주변 4강 국가 중 미국에 이어 두 번째 방문인 만큼, 신북방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대변
    - 문 대통령은 동방경제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동북아와 유라시아 경제협력에 대한 구상을 밝히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도 정상회담을 가질 계획
    - 또한 정부는 유라시아 교통·물류 인프라를 연계하여 한국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통일 기반 구축을 위해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설치할 예정
- 이에 본 연구는 신북방정책의 의미를 알아보고, 정책 추진의 기회와 위협요인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 역대정부의 북방정책 추진 현황 >

구분	주요 내용	비고
노태우 정부	- 북방정책 : 1990년 소련과 국교수립	외교중심
김대중 정부	- 햇볕정책 : 對 러시아 우호관계 강화	외교중심
노무현 정부	- 평화번영정책 : 對 러시아 우호관계 지속	외교중심
이명박 정부	- 자원외교 : 남·북·러 가스관 사업 추진 등	경제중심
박근혜 정부	-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 남·북·러 물류사업 추진 등	경제중심

자료 : 언론자료를 토대로 현대경제연구원 작성.

## 2. 신북방정책 추진의 기회와 위협 요인

### ① 신북방정책의 의의

○ 정부는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구상을 밝히면서, 평화의 기반을 확대하고 유라시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신북방정책을 추진

- 문재인 정부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과 경쟁구도를 타파하고 동북아 지역의 장기적 평화협력 환경 조성을 위해 신북방정책을 제시
  -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를 형성해 동북아 평화와 협력적 환경을 조성, 이를 위해 동북아 주요국 간 다자협력 전략의 제도화를 도모
  - 아세안과 인도와의 관계 강화, 유라시아 협력강화를 통해 동북아를 넘어서는 남방·북방 지역을 '번영의 축'으로 삼는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을 병행 추진(국정운영 5개년계획, 2017.7)
- 나진·하산 물류사업과 철도·전력망 등 남·북·러 3각 협력 추진 기반 마련, 유라시아경제연합(EAEU·러시아·키르기스스탄·아르메니아·벨라루스, 2014년 창설)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 참여 등이 주요 내용임
  - 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밝혔던 북극 항로 공동 개척 등 경제협력 확대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음
  -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설치해 동북아시아를 비롯한 유라시아 지역 국가와의 교통·물류·에너지 분야의 연계성 강화를 모색
- 이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실천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는 남북경협과 동북아경협을 활용해 동북아 평화 정착과 공동번영을 달성하고자 함
  -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동해권, 서해권 등 권역별 남북 협력 벨트를 마련하고, 동서를 잇는 이른바 'H 경제 벨트'를 조성해 장기적으로는 남북 시장통합, 즉 경제통일을 이룬다는 구상
    - \* 동해권 에너지·자원벨트 : 금강산, 원산·단천, 청진·나선을 남북한이 공동개발해 동해안과 러시아를 연결
    - \* 서해권 산업·물류·교통벨트 : 수도권, 개성공단, 평양·남포·신의주 연결 서해안경협벨트 건설 및 경의선 개보수, 서울-베이징 고속교통망 건설로 중국 주요도시와 1인 생활권 구축
    - \* 동해·DMZ 환경·관광벨트 : 설악산·금강산·원산·백두산 관광벨트 구축 및 DMZ 생태·평화안보 관광지구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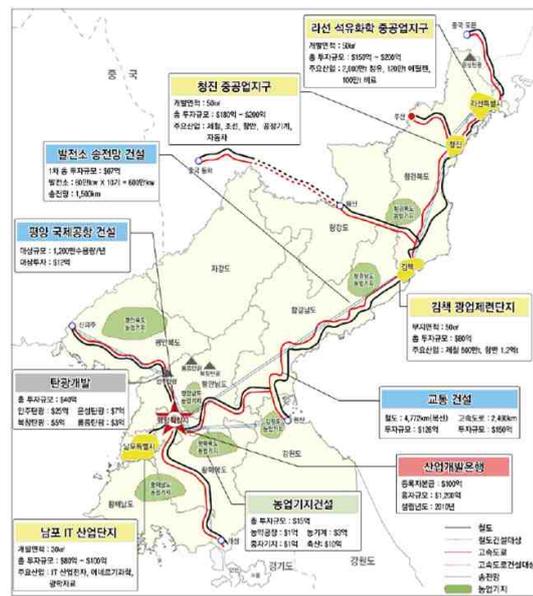
※ (북한의 투자유치 계획)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북한 투자유치 계획의 내용이 상당 부분 일치하고 있어 남북간 합의로 발전될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

- 북한은 경제개발 10개년 계획을 통해 '신의주-남포-평양'의 서남 방면과 '나선-청진-김책'으로 이어지는 동북 방면의 양대 축을 개발한다는 계획
  - 북한은 2011년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2010~2020)」을 발표, 10년 간 총 1,000억 달러의 인프라 등 투자 유치 계획을 수립
- 북한은 10년 간 총 1,000억 달러의 인프라 등 투자 유치 계획을 수립, 농업, 산업단지 개발, 에너지 및 인프라 개발 등 크게 12대 분야로 나누어 추진
  - (공업지구) 남포IT산업단지 등 공업지구 개발에 490~580억 달러 투자 예정
  - (교통) 철도·고속도로·공항 등에 258억 달러 투자 예정
  - (에너지) 탄광 건설, 화력발전소 건설, 송전망 건설 등에 100억 달러 투자 예정
- 남북한 모두 한반도 개발을 위해 'H 경제 벨트'를 조성해 장기적으로 협력을 확대해나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어 향후 남북 간 합의로 발전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

<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



<북한의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 계획' >



자료: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및 국토교통부 자료 참고.

② 주변국의 관련 정책

-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극동 개발과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를 연계하려는 러시아의 신동방정책은 정부의 신북방정책과 지향점이 유사
  - 러시아는 성장하고 있는 동아시아 시장에 참여하여 국토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장기적으로 강대국 러시아로의 재도약을 모색하고자 신동방정책(New East Asia Policy)을 추진
    - 신동방정책은 러시아가 중국, 한국, 일본 등 동북아 주요국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와의 경제 및 외교적 협력을 심화해 나간다는 것임
  - 2012년 푸틴 대통령은 극동의 잠재력을 활용하여 아태지역에서 러시아가 합당한 지위를 차지해야 한다며 극동 개발에 집중할 것을 천명
    - 러시아는 2012년 극동개발부를 신설하는 한편, '선도개발구역(TOR)<sup>1)</sup> 설치에 관한 법'에 근거하여 극동지역에 15개의 TOR을 설치
    - 또한,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법'을 통해 블라디보스토크, 바니노, 코르사코프, 페벡, 페트로파블롭스크 캄차카항 등 5개의 자유항<sup>2)</sup>을 지정
  - 상대적으로 낙후된 극동 지역 개발을 통해 아태지역 내 위상을 재확인하고자 하는 러시아 정부와 북방경제협력을 통해 동북아 경제협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 지향점이 유사하여 향후 협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 극동지역의 선도개발구역 현황 >

행정구역	선도개발구역	육성분야
연해주	나제진스크	운송, 물류, 경공업, 식품
	미하일롭스크	농축산(돼지사육, 사료)
	발쇼이카멘	조선, 선박수리
	네프테히미체스키	석유화학
하바롭스크주	하바롭스크	운송, 물류, 철강
	콤포몰스크	항공기 부품, 목재가공
아무르주	프리아무르스카야	시멘트, 석유정제, 물류
	벨로고르스크	풍가공, 사료, 제빵
추코트카자치주	베린롭스크	석탄, 천연가스 채굴 및 가공
사하 공화국	칸갈라스	건축자재, 페인트
	유즈나야아쿠티야	노천광물채굴
캄차카주	캄차카	관광, 북극항만개발
	유즈나야	농축산
사할린주	고르니 보즈두흐	관광
	아무로한간스카야	물류, 비철금속

자료 : 국토연구원(2016) 자료로 재구성.

< 선도개발구역 추진 지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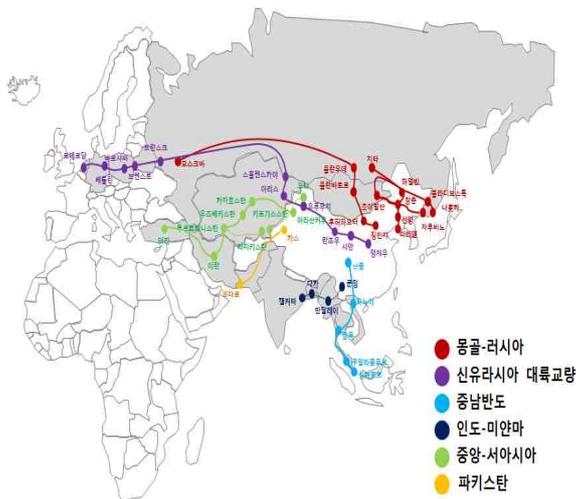


자료: 구글 지도로 현대경제연구원 작성.

1) 선도개발구역(Territories of Advanced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 TOR)은 러시아 극동지역 경제·사회발전 도모 및 투자유치 환경조성을 위해 인프라 구축, 세계 혜택 제공 및 행정지원 등을 범으로 보장.  
 2) 항구를 통해 들어오는 화물의 통관 간소화와 자유항 지역으로의 일정 기간 무비자 입국을 보장하며 그 외 기업 활동을 위한 세계 혜택, 임대료 감면 등을 제공. 이에 따라 러시아 극동지역 내 5개 자유항 지역(연해주, 하바롭스크주, 사할린주, 캄차카주, 추코트카 자치주)로의 최대 8일 무비자 입국이 가능. KOTRA, "러시아 선도개발구역 및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동향", KOTRA 해외시장뉴스, 2017.4.17 참고.

- (중국의 일대일로) 일대일로 사업에는 남북중러 접경지역 사업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음
  -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는 육해로를 통해 중국에서 중앙 및 동남아시아, 중동을 지나 유럽을 연결하는 6개 회랑(Economic Corridor)을 건설하는 사업<sup>3)</sup>
    - 일대일로는 전 세계 GDP의 30%, 세계 인구의 60%에 해당하는 65개 국가를 참여시켜 육상과 해상을 철도, 도로, 항만으로 연결, 인프라 건설, 에너지 투자를 병행하는 경제개발 구상
  - 2013년 시진핑 주석의 제안으로 시작된 일대일로 사업은 2017년 현재 AIIB 출범 등 기초적 사업 추진 인프라를 마련
    - ‘일대일로’의 재원 규모는 약 1,900억 달러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이 보유하고 있는 1,000억 달러, 브릭스(BRICS) 투자개발은행(NDB)이 보유한 500억 달러, 중국이 단독 출자한 실크로드기금 400억 달러 등임<sup>4)</sup>
  - 일대일로 사업에는 남북중러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한 철도·도로·전력망 연결 등의 사업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음

< 중국 일대일로의 6대 회랑 플랜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작성.

< 중국의 일대일로 추진 일정 >

구분	회의
'13.09	-시진핑 주석 중앙 및 동남아시아 순방 중 '일대일로' 제시
'14.12	- 실크로드 기금 설립
'15.07	- 브릭스 국가 신개발은행(NDB) 설립
'16.01	- AIIB 출범(54개 회원국 확보)
'16.03	- '13차 5개년 계획'에 일대일로 사업 포함
'16.06	- AIIB 1차 연차총회(베이징)
'17.05	-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 (베이징)
'17.06 (6.16~18)	- AIIB 2차 연차총회(한국 제주)

자료 : 中國發展改革委員會.

3) 현대경제연구원, “중국 일대일로의 기회와 시사점”, 『현안과 과제』 17-14호 2017.06.14 참고.

4) 국회입법조사처, 『2017 국정감사 정책자료 I』, 2017. p. 90. 참고.

### ③ 신북방정책의 기회와 위협 요인

#### ○ (기회 요인) 신북방정책 추진은 유라시아 경제권 진출, G-Zero시대에 맞는 균형외교 수립 등 한국의 바람직한 안보와 경제이익 확보에 도움

- 각 국별 초국경 협력 추진 의지 : 신북방정책은 러시아와 중국 등 주변국의 대외경제협력정책과 상당한 접점이 있는 만큼, 우리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
  - 러시아는 신북방정책을 통해 극동개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면서, 동북아 국가들과의 에너지·물류협력을 강화한다는 입장
  - 중국도 일대일로 구상으로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육상 실크로드와 동남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해상 실크로드를 구축 중
  - 몽골 역시 2013년 자국의 지정학적 위치를 활용하기 위해 중국·러시아와 철도, 도로, 전력망, 송유·가스관 등을 연결하는 ‘초원의 길’ 이니셔티브를 제안
  - 한국의 신북방정책도 교통·물류·에너지와 관련한 유라시아 경제협력 강화가 핵심과제인 만큼 러시아, 중국, 몽골의 정책과 상당부분 부합
  
- 유라시아 경제권의 잠재력 활용 기회 : 신북방정책을 통한 유라시아 진출은 미래 성장 동력을 찾고 있는 한국에게 기회의 땅이자 블루오션으로 부상
  - 유라시아는 세계인구의 70%, 에너지 자원의 75%, GDP의 70%<sup>5)</sup>가 집중되어 있는 지역으로, 교통·물류의 발전으로 세계경제권의 중심축으로 급부상
  - 특히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을 비롯해 극동지역에 대규모 투자를 실시 중인 러시아와의 교류 확대는 한국 경제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음
  - 나아가 러시아를 비롯한 유라시아지역과의 경제적 연계 강화는 남북한 분단으로 인해 사실상 섬나라에 가까운 한국의 경제영역 확대에 기여
  
- G-Zero 시대 균형외교 추진 기반 마련 : 신북방정책을 통해 한반도 평화구도 정착에 기여할 수 있고, ‘동북아 플러스 책임공동체’ 구축에도 도움
  - 최근 글로벌 권력구조 측면에서 세계경제를 이끌어 온 미국의 영향력이 크게 약화돼 국제사회가 다원화되는 ‘G-Zero’ 시대에 진입하는 추세
  - 신북방정책은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러시아를 비롯한 유라시아 국가들과의 외교관계 확대를 통한 균형외교 수립에 기여
  -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아세안(ASEAN)과 인도를 합류시키는 ‘동북아 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5) fobes, Eurasia: The World's Largest Market Emerges, 2016.10.21.

○ (위협 요인) 북핵 문제 미해결 등 유라시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신북방 정책 추진의 불확실성으로 존재

- 국제사회의 러시아 제재 강화 : 북핵 문제와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서방의 對 러시아 제재 국면 지속이 신북방정책 추진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
  -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를 비롯해 미국 대선개입 해킹 사건, 북핵 문제 등으로 미국과 유럽연합은 對 러시아 경제 제재를 강화
  - 서방의 對 러시아 제재가 지속될 경우 에너지·물류 등 러시아와의 협력이 필수적인 신북방정책 추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sup>6)</sup>
- 북핵 문제에 따른 대북제재 지속 : 유라시아 협력 확대를 위해 북한의 참여가 필요하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로 어려움이 존재
  - 한반도 횡단철도(TKR),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의 연결을 비롯해 철도·전력망 등 남·북·러 3각 협력에 북한의 참여가 필수적임
  - 하지만 북한의 핵 개발 지속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지속되고 있어 한국의 신북방정책을 비롯해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존재
  - 미국은 대북 원유 및 석유제품 판매 금지, 北 선박이나 유엔제재를 거부하는 국가 선박의 美 영해 운항금지 등을 규정(북한·러시아·이란 제재안, '17. 8. 2)
  - 이미 남·북·러 간의 TKR-TSR 연결 사업과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 사업으로 추진되던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대북제재로 잠정 보류된 사례

< UN의 對 북한 제재 일지 >

구분	제재	주요 내용
1차 핵실험 ('06.10. 9)	1718호	- 무기, 사치품 등 금수조치(embargo)
2차 핵실험 ('09. 9. 25)	1874호	- 금융 제재 강화 - 선박 검색 강화
3차 핵실험 ('13. 2. 12)	2094호	- 대량 현금(Bulk Cash) 이전 금지 - 선박 검색 의무화
4차 핵실험 ('16. 1. 6)	2270호	- 광물수출 금지 (민생 목적 제외)
5차 핵실험 ('16.11.30)	2321호	- 석탄 수출 상한선 (금액·총량) 제한
ICBM 발사 ('17.8.5)	2371호	- 북한과의 신규 합작 및 기존 사업 확대 금지

< 미국의 대북제재 관련 항구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작성.

주 : 미국의 북한·러시아·이란 제재안에서 중·러 등 지정 항구를 주기적으로 감시할 것을 명시.

6)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한국과 러시아 간 교역(2014년 258억 달러→2016년 134억 달러)이 감소한 바 있음.

○ (종합평가) 신북방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이 교차

- 한국을 비롯해 러시아, 중국 등 주변국 모두 유라시아 협력의 필요성을 크게 공감
  - 한국의 신북방정책 : 동북아 지역의 장기적 평화협력 환경 조성과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천을 위해 유라시아 협력이 필요
  -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 극동 개발과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를 연계 하여 강대국으로서의 재도약의 필요성
  -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 : 6대 회랑 건설 사업에 남·북·러 협력이 필요
  - 몽골의 초원의 길 이니셔티브 : 중국·러시아와 연결되는 교통·물류망 구축
- 한국의 신북방정책 추진은 유라시아 경제권 진출, '동북아 플러스 책임공동체' 구축 토대 마련 등 다양한 기회요인을 제공
  - 문재인 대통령의 신북방정책과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은 상호 연결고리가 많아 우리에게 경제적, 안보적 기회를 제공
- 반면 북핵 문제 미해결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 등의 위협요인도 상존
  - 특히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는 신북방정책 추진에 부정적 영향

< 신북방정책 추진의 기회와 위협요인 >

구분		주요 내용
신북방정책과 주변국 입장	한국	- 신북방정책 · 동북아지역의 장기적 평화 협력적 환경조성구상
	러시아	- 신동방정책 · 극동 개발과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를 연계
	중국	- 일대일로 구상 · 남북중러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한 경제협력 가능성
	몽골	- 초원의 길 이니셔티브 · 주변국과 교통·물류망을 구축, 유라시아 지역협력 확대
기회요인 (Opportunity)		① 각 국별 초국경 협력 추진 의지 ② 유라시아 경제권의 잠재력 활용 기회 ③ G-Zero 시대 균형외교 추진 기반 마련
위협요인 (Treats)		① 국제사회의 러시아 제재 강화 ② 북핵 문제에 따른 대북제재 지속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작성.

### 3. 시사점

○ (투 트랙 접근 필요) 북한을 포함한 다자 협력이 북한을 제외한 양자 및 다자 간 북방경제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투 트랙으로 사업을 추진

- 북한이 참여하는 사업과 북한이 참여하지 않는 사업을 분리하여 접근
  - 북핵 문제가 북방경제협력 사업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양자(한러·한중) 및 다자(한중러몽 등) 간 추진 가능한 사업은 북핵 문제와 무관하게 추진
  - 여건이 조성되면 추진 중인 양자 및 다자 사업에 북한이 참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기 추진 사업 재개) 나진-하산 프로젝트 등 기 추진 사업의 재개를 통해 신북방정책 추진 및 한반도 신경계지도 구상 실현의 동력을 확보

- 극동지역에서 추진된 남북러 협력 사업의 성공 사례로 지적되는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재개를 '한반도 신경계지도' 구상 실현의 단초로 삼아야 함
  - 환동해 경제벨트 실현의 첫 단추로 나진-하산 프로젝트 재개 및 금강산 관광 재개를 고려할 수 있음
  - 환황해 경제벨트 실현을 위해서는 훈춘 물류단지 활성화 및 개성공단 재개를 고려할 수 있음

○ (국제 협력 기제의 효율적 활용)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을 통한 사업 추진 및 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AIIB)을 활용한 재원 마련 방안 모색

- 동북아국가간 교통, 자원, 관광, 투자, 환경 등 5개 분야에서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을 추진하기 위한 적극적 역할 수행
  - 한·EAEU 및 한·몽 FTA 추진 과정에서 GTI 관련 사업 협력 내용을 포함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 1991년 유엔개발계획(UNDP)의 주도로 두만강개발계획(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rogramme, TRADP)이 설립되어 한국, 중국, 러시아, 몽골, 북한(2009년 탈퇴) 등이 참여. 2005년 '광역두만강개발계획'(the Greater Tumen Initiative, GTI)로 개칭하였으나, 추동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 GTI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동북아의 공동 이익(mutual benefit) 창출 기대
  - 특히, 현재 추진 중인 중몽러 경제회랑 추진 과정에서 훈춘 물류단지 개발 및 러시아 자루비노 항 개발 등 기추진·기합의 사업과 연계하는 방식을 통해 우리의 참여도를 제고
- ※ 2016년 6월 중국, 몽골, 러시아는 교통 물류 인프라 및 산업 협력에 관한 32개 프로젝트를 포함하는 「중몽러 경제회랑 건설프로그램」에 합의.  
교통 물류 분야의 초이발산~만저우리~치치하얼~하얼빈~쑤이펀허~블라디보스토크로 이어지는 연해주 I 노선과 초이발산~우란하오터~창춘~옌지~자루비노로 이어지는 연해주 II 노선은 GTI에서 제안된 사업이기도 함
-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바람직한 역할) 새롭게 출범하는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기존 북방협력 관련 합의를 재검토하여 단계적 추진 계획을 수립
-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기합의된 북방협력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통해 사업 추진의 우선 순위를 확립하고, 단계별 추진 계획을 수립
  - 특히, 북방경제협력사업 추진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기적인 로드맵을 수립하여 이를 실천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유라시아 협력에 관한 주변국들과의 정책적 공감대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의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해정 연구위원 (2072-6226, hjlee@hri.co.kr)  
이용화 연구위원 (2072-6222, yhlee@hri.co.kr)